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2018. 1.

관계기관 합동

||| 목 차 |||

I . 추진배경	1
II .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	4
III . 개선 및 보완필요사항	6
IV . 기본 추진방향	7
V . 금융업권별 세부과제	8
1. 은 행	8
2. 금융투자업	16
3. 중소기업	19
4. 보 험	21
VI . 향후 추진계획	22
[별첨]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 (종합)	23

I. 추진배경

-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는 금융회사가 적정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유인체계
 - 자본비율(BIS, NCR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흡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
 - 예대율,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바탕으로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
- 다만, 최근 가계부채 쏠림현상 등에 따라 이러한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08년 143% → '15년 170%로 27%p 상승(OECD 국가 중 3번째로 빠른 증가추세)
 - 가계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시중자금을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부동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이는 금융권이 스스로 위험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관행을 심화시킨 측면
 - 경직적인 건전성분류 기준 및 리스크 측정방식 등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취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
 - ※ 특히,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투자·중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 등도 지속 제기
- 아울러, 가계부채로 과도한 여신 집중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경제 전체적으로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
 -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편중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를 강구할 필요

☞ 금융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금융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참고 1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황

1. 은행

☐ **(BIS 비율)** 은행 자본이 예상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국제 바젤기준에 따라 산정)

$$*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 + 시장위험 + 운영위험)}}$$

○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유지 의무

- 이와 별도로, 바젤Ⅲ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최대 2.5%)** 추가적립 필요('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중)

○ **은행별로 표준방법**(사전에 설정된 위험가중치 적용; 7개), **내부등급법**(은행 자체 모형으로 위험가중치 추정; 12개) 활용 중

- 내부등급법의 경우 은행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대출종류별 부도율(PD)**, **손실률(LGD)** 등을 산출·활용

☐ **(예대율)** 시장성 수신에 의존한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 범위 내로 제한('12.7월 도입)

☐ **(바젤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의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점검

* **[필라1]** 최저 BIS 비율 규제 →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감독당국이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자본부과 등 조치 → **[필라3]**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상황을 공시(시장규율)

2. 금융투자업

☐ **(순자본비율 : NCR)**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비율

$$* \text{NCR} = (\text{영업용순자본} - \text{총위험액}) / \text{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

$$\text{총위험액} = \text{시장위험액} + \text{신용위험액} + \text{운영위험액}$$

☐ **(레버리지 비율)** 과도한 차입경영을 제어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내로 제한**

3. 중소기업

< 상호금융 >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회계적 자기자본) 비율

○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

$$\text{* 순자본비율} = \frac{(\text{총자산} - \text{총부채} - \text{출자금} + \text{후순위차입금} + \text{대손충당금})}{(\text{총자산} + \text{대손충당금})}$$

□ **(예대율)**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예탁금·적금·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중을 80% 이하로 제한('13.6월 도입)

* 다만,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이 20%~30%인 조합은 예대율을 90%, 30% 이상인 조합은 100%까지 허용

< 저축은행 >

□ **(BIS 비율)** 자본이 예상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여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은행과 달리 신용위험만 평가, 바젤 I 과 유사)

$$\text{* BIS 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신용위험가중자산}$$

○ 과거 5% 수준이었으나 자산규모에 따라 7%로 단계적 상향

□ **(자산건전성 분류)** 은행·보험·금투업권은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FLC 기준 사용, 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

4. 보험

□ **(지급여력제도 : RBC)**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지급여력(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

$$\text{* RBC} = \frac{\text{가용자본(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총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text{요구자본(보험·신용·시장·금리·운용리스크 규모)}}$$

Ⅱ.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

◆ '15년 이후 가계·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쏠림이 심화되고,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심화(자금중개기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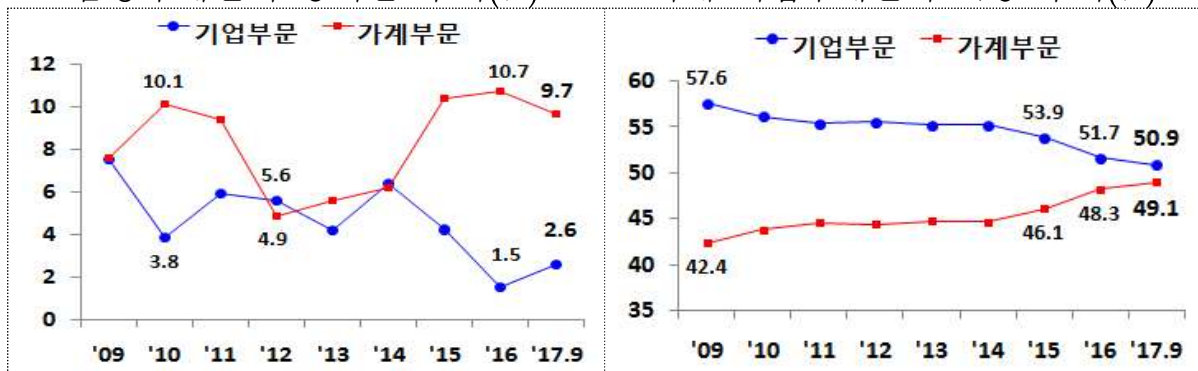
①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문으로 자금흐름이 지속 확대

-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 금융부채잔액*이 기업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였으며, '15년부터 증가폭 격차가 심화

* '09년 ~ '17.9월 중 평균 증가율: 가계부채잔액 8.3% > 기업부채잔액 4.6%
(기업부문은 非금융법인, 금융부채잔액은 대출금·채권 기준, 한은 자금순환표)

- 총 민간신용 중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하락

< 금융부채잔액 증가율 추이(%) > < 가계·기업부채잔액 비중 추이(%) >



② 금융업권별로 은행, 유형별로는 주담대가 가계부채 확대를 견인

- **(업권별)** 총 가계대출('17.9월, 1,341.2조원)의 48.1%를 차지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15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

* '15년 ~ '16년간 과거 추세(年평균 60조원)를 대폭 상회하여 연 129조원 증가

-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업권별 가계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은행권을 상회

<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추이 (조원, %; 괄호안은 증가율) >

	'14년	'15년	'16년	'17.9월
은행	519.6 (8.0)	563.7 (8.5)	617.4 (9.5)	645.5 (6.9)
보험	90.8 (5.1)	98.8 (8.8)	108.4 (9.7)	112.0 (7.6)
저축은행	10.3 (12.0)	13.7 (33.1)	18.3 (33.5)	20.6 (12.6)
상호금융	167.3 (8.8)	182.1 (8.9)	207.7 (14.1)	215.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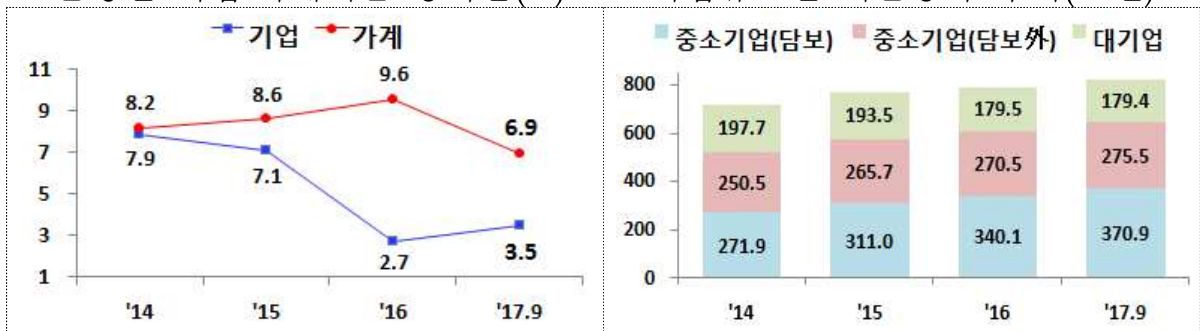
[별첨]

- **(유형별)** '15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분(총 316조원)의 상당부분(약 189조원, 60%)은 주담대가 차지
 -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익성·연체율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담대 부분으로 자금공급이 집중
 - * '15년~'17.9월 가계대출 증가분 중 주담대 비중(%) : 은행 82, 보험 59 등
 -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급도 확대 추세

③ 기업금융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확대

- 은행권 기업대출 공급은 가계대출 확대, 기업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증가율 둔화세 지속('15년 7.1% → '17.9월 3.5%)
-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분야로 자금흐름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담보대출 공급*이 확대
- *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 ('12년) 48.8 → ('17.9월) 57.4 (+8.6)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증가율(%)> <기업규모별 대출증가 추이(조원)>



④ 혁신·성장부문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중개 활력도 저하

- 대형 IB의 총자산(5개사, 205.1조원) 중에서 기업금융 자산*은 17.5조원(8.6%)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17.9월말 기준)
 - * 대출채권(대출금·매입대출채권·사모사채), 회사채·기업어음, 주식(출자금 포함), 비연결대상회사 투자지분 등
- 최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특화 증권사의 직접 투자·출자규모 및 기업공개(IPO) 실적 등도 다소 주춤
- * 코스닥 등 IPO실적(억원) : ('16.10월~'17.4월) 1,579 → ('17.4월~10월) 792.5
M&A중개·자문 : ('16.10월~'17.4월) 4건 → ('17.4월~10월) 1건

Ⅲ. 개선 및 보완필요사항

◆ 금융완화 기조 등 거시경제 여건과 맞물려, 자본규제 등 금융 유인체계가 가계부채 쏠림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

① 가계대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 보다는 주담대 등 가계금융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

○ 규제비율(BIS 비율)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제한된 대출여력을 기업부문 보다는 안정적인 가계대출로 배분할 유인 발생

* 은행 BIS 비율 산정시 평균 위험가중치(17.9월, %): 가계대출 25.6 < 기업대출 66.3

○ 특히, 비은행금융권의 경우 은행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할 우려* 등도 제기

* (예) 은행은 고위험 주담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별도로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 저축은행·보험 등은 주담대 유형별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흡

②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 규제를 넘어, 경제 전체적으로 과도한 자금쏠림 등을 제어할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이 미흡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 특정부문 자산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여, 이를 추가 자본적립, 영업규제 등에 반영할 필요성 제기

③ 지나치게 보수적·경직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으로 기업 금융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

① (기업구조조정)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인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규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측면

② (동산담보대출)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담보가 '적격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대출위험이 과도하게 인식되는 등 자본규제 측면에서의 애로 존재

③ (대손충당금) 상호금융업권은 여타 업권에 비해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아 취급유인 저하(요주의 : 상호금융 10% > 은행·저축은행 7%)

○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기특화 증권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지적

IV. 기본 추진방향

-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기본 방향

- 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 ②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 ③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 금융업권별 세부과제(요약) >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대율 산정개선 ✓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문 CCyB 도입 ✓ 리스크관리실태 평가(필라2)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기업 건전성분류 합리화 ✓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등
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특화 증권사 투융자 부담 완화 ✓ 코스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중소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 ✓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합리화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환능력에 맞춰 위험도 차등

V. 금융업권별 세부과제

1

은행

① **(예대출 산정방식 개선)** 예대출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 **(배경)** 당초 예대출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12.7월)

➔ 비대칭적인 현행 자본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예대출 규제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운용

○ **(세부방안)** 예대출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상향(+15%) 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15%) 적용

현행	개선
원화대출금 원화예수금 ≤ 100%	$\frac{(\text{가계대출금} \times 1.15) + (\text{기업대출금} \times 0.85)}{\text{원화예수금}} \leq 100\%$

(1) 급격한 대출여력 축소 방지, 기업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가계·기업부문 가중치를 함께 가감 조정(±15%)

* 가계부문 가중치만 상향시 대부분 은행 예대출이 100% 초과(평균 104%)

(2)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폭은 ±15%로 설정하되, 추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

(3) 가계 - 기업부문간 자금배분 유인구조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 적용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기업대출 영위시 시중은행과 동일방식 적용

○ **(유예기간)**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8년 하반기 시행(6개월 유예기간 부여)

☞ '17.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출은 98.1% → 99.6%로 상승, 향후 조달비용 부담 등에 따라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예상

참고 2 예대율 규제 개선시 영향

① **(은행별)**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차등적용시, 규제은행 예대율('17.9월 96.8%)은 가중치별로 0.5%~1.0%p 상승(예상)

-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 예대율은 오히려 하락

* 원화대출 증가액의 60%이상(시중은행 45%)을 중소기업에 지원(한은규정)

- 가중치 15% 적용시, 1개 은행이 규제비율을 초과하고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99.6%까지 상승

➡ 시중은행 예대율이 100%(가중치 $\pm 20\%$)를 초과할 경우에 대출 자산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15%로 설정

(단위 : 조원, %, %p)

구 분	현행 예대율 ¹⁾	가중치 차등시 예대율 ¹⁾		
		$\pm 10\%$	$\pm 15\%$	$\pm 20\%$
A 은행	98.8	99.1 (+0.3)	99.2 (+0.4)	99.3 (+0.5)
B 은행	98.4	99.4 (+0.9)	99.8 (+1.4)	100.3 (+1.9)
C 은행	92.7	97.4 (+4.7)	99.8 (+7.1)	102.1 (+9.4)
D 은행	98.4	99.2 (+0.7)	99.5 (+1.1)	99.9 (+1.5)
E 은행	99.1	100.2 (+1.2)	100.8 (+1.7)	101.4 (+2.3)
전체 시중은행	98.1	99.1 (+1.0)	99.6 (+1.5)	100.1 (+2.0)
전체 지방은행	96.3	93.6 ($\Delta 2.8$)	92.2 ($\Delta 4.2$)	90.8 ($\Delta 5.6$)
전체 규제은행	96.8	97.3 (+0.5)	97.5 (+0.7)	97.8 (+1.0)

1) 예대율 산정시 제외되는 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

② **(시장영향)**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 유지를 위하여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약 11조원 규모

-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유예기간 등을 고려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과거에도 예대율 시행('12.7월)에 앞서 예수금이 다소 증가했으나, 예금금리는 큰 변동없이 기준금리 추세와 동행

	'11.1분기	'11.2분기	'11.3분기	'11.4분기	'12.1분기	'12.2분기
예수금 증가(조원)	18.7	9.6	19.3	22.4	8.4	11.2
수신-기준금리차	0.67	0.45	0.46	0.52	0.47	0.38

참고 3 바젤3 규제 도입에 따른 예대율 운용방향

1. 주요이슈 (TF 논의사항)

- 금년 도입될 바젤3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현행 예대율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

* Net Stable Funding Ratio = 가용안정자금(부채·자본) / 필요안정자금(자산)
→ 장기간(1년 이상)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여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토록 유도하는 중장기 유동성비율

- 다만, 자금조달의 질적 측면 관리, 대출증가 억제효과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는 여전히 유효**

❶ 당초 예대율은 은행의 유동성 관리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

❷ 예대율은 NSFR과 달리 시장성수신(CD, 은행채 등)을 자금 조달 부문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의 질적 측면도 중시

* 반면, NSFR은 잔존만기 1년 이상 부채는 시장성수신도 가용안정자금으로 인정

❸ 예대율 규제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측면 등도 감안할 필요(→ 위반시 직접제재가 아니라 공시, 개선계획 제출)

2. 향후 운용방향

- NSFR 도입시에도 시장성수신에 기반한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한 보완적 규제로서 예대율을 개선·병행 운용

○ 아울러, 규제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

* (은행권 의견)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 적용, 가계대출만 영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적용 제외,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前 유예기간 부여 등

-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예)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에서 제외하고 경영실태평가에만 반영·점검 등

② **(고위험 주담대 위험관리강화)** LTV가 과도하게 높은 일부 주담대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인식·반영(위험가중치 상향)

- **(현행)**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중

* (i) 만기일시상환 대출,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3건 이상 다주택 담보대출자(RW 50%), (ii) 만기시 원금상환 10% 미만 대출(RW 70%) > 일반 주담대 RW 35%

- **(추가)**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LTV 60% 초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도 상향(예 : 35% → 70%)

- 다만, 은행별 BIS 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조정(예 : 2년)하는 보완방안 등 검토

※ 한편, 최근 증가세가 높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8.1분기) 추진

☞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적정화하여, 개별은행 차원에서 주담대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 위험가중치 상향시, 은행권 평균 BIS비율은 최대 약 0.14%p 하락(추정)

③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감독강화)**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필라2)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항목을 신설

- ① **(계량항목)**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규모·속도)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가계신용 리스크*’를 항목에 추가

* (예) 신용리스크 부문(평점 50% 배정)에 ‘익스포저 대비 가계신용 리스크량 비율’ 항목을 추가하고, 별도 평점(예 : 5%) 부여

- ② **(비계량항목)** 가계대출의 성장속도 및 편중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실태*를 비계량 지표로 추가

* (예)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

➡ 평가결과, 가계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 MOU 체결 등 조치

참고 4 필라2 리스크 평가항목 조정방안 (예시)

구분	리스크 유형	현 행		개선(안)	
		계량지표	비중	계량지표	비중
계 량 항 목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중심 자기자본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률 	15%	(좌 동)	15%
	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자기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장외파생상품 위험가중자산비율 	50%	(좌 동)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익스포저 대비 가계 신용리스크량비율 	(5%)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 	5%	(좌 동)	5%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대비 운영리스크량 비율 	7%		7%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원화에대율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10%		10%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대비 금리 EaR 비율 자기자본 대비 금리 VaR 비율 	7%		7%
비 계 량 항 목	신용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차주, 계열, 산업, 담보) 	6%	(좌 동)	6%
	신용 리스크 모니터링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항목 및 보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 고위험자산 및 편중자산에 대해 별도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자기자본 대비 가계 부문 편중리스크 비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가계부문 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
비 계 량 항 목	신용 포트 폴리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포트폴리오 관리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포트폴리오가 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가계부문 대출 증가가 적정수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가계부문의 대출 편중도 관리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④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개요)**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 등을 위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가계신용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총신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바젤3 규제)**은 '15년말 이미 도입

-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 [해외사례] '13.2월, 스위스는 주담대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운영 중

- **(세부방안)** 적립판단지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적립비율' 결정 후,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적립

* (예)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적립비율 결정 → 가계신용(익스포저) 비중이 50%인 은행의 경우 0.5%(1% X 0.5) 추가 자본적립(보통주) 의무 발생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도입안 (예시)**

- ① **(적립판단지표)** 'GDP 대비 가계신용갭'을 주지표로 사용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갭,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
- ② **(적립비율 결정)**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결정**
- ③ **(은행별 적립비율)**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 비중(익스포저)**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보통주) 산출**
- ④ **(적립시기)**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 **(미충족시 조치)**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제한 등 조치

- **(시행시기)** 판단지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19년부터 도입·시행(과거 CCyB 도입시에도 약 1년간 준비)

☞ 개별은행 차원의 자본규제를 보완하여, 거시 경제적으로 가계 부채 쏠림현상('구성의 오류')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제어·관리

* 최대 적립비율(2.5%) 가정시, 시중은행별 0.8%~1.2%p의 추가 자본적립(추정)

참고 5 스위스의 주담대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사례

1. 도입경과

- '13.2월, 스위스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경기 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제도를 시행
 - 시행배경으로 모기지 대출증가, 주택가격 상승이 은행 건전성과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 등을 언급*
 - * 다만, '80년대 주택버블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초기 적립비율을 1%로 설정('13.12월, Federal Council 보도자료)
 - '14.1월, 저금리 기조, 은행의 위험선호 강화 등으로 모기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 → 은행시스템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적립비율을 2%로 상향

2. 평 가

- 스위스 주담대 부문 CCyB는 주담대 증가속도 관리,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양적 측면) 저금리 기조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지속 증가 하였으나, CCyB 시행 이후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

< 스위스 주담대 추이 (단위 : 백만CHF, %; Swiss National Bank)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주담대 규모	809.7	847.9	884.0	918.6	943.3	967.5
증가율(YoY)	5.51	4.76	4.26	3.91	2.69	2.57

- (질적 측면) 바젤*에 따르면, 주담대 CCyB 도입으로 신용 공급자 구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Higher Bank Capital Requirements and Mortgage Pricing: Evidence from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CCB), BIS working paper 511

- 자본비용 감내 여력이 높은 은행(자본건전성이 높거나 주담대 익스포저가 낮은 은행) 중심으로 신용공급자 구성이 변화* →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주담대 CCyB 도입 이후, 자본여력이 취약한 은행은 평균 2.72bp 금리를 고객에게 전가, 자본건전성이 높은 은행은 평균 0.49bp 전가

⑤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과도한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구

①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예:5%) 신설

② **(기업구조조정)**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업에 대한 다른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2) 채권은행이 채무재조정 이후, 사업전망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대상기업의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대상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 점검시, 미래 채무상환 능력,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관한 채권은행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③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자금조달수단 확대 차원에서 기계설비 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완화 강구

* 전체 동산담보대출(약 2,300억원) 중 기계설비 담보대출이 80% 이상 차지

- '기계거래소' 등을 통해 가격평가 및 처분이 용이한 일부 범용기계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

* 현재 기계설비는 적격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경감받지 못하므로 BIS 비율 및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과 기업에 불이익 발생 가능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평가·회수 등) 구축도 병행

④ **(기업외화대출)** 국내기업(본사)이 보증한 해외지점·법인 외화대출시, 본사의 국내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보증을 제공한 국내본사의 원화표시 신용등급 활용이 제한되어, 위험가중치가 과도하게 산정(無등급, 100%) → [개선] 본사 신용등급 활용(예: AA, 20%)

① **(모험자본 역할 강화)**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생산·혁신적 분야 자금공급에 대한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①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 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

(1) **투자** :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시,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

* [현행]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

(2) **융자**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

* [현행]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 (위험값 0%~32%)에 반영

② **(전체 증권회사)**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현행] 개별위험값 6%~12% 적용 (코넥스 동일) → [개선] 5%~10%

③ **(상장주관사)**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 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

* 상장주관사가 테슬라 요건 활용시, 일정기간(1~6개월) 일반청약자에 대해 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매수하는 풋백옵션 부여

** 영업용순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값 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

☞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건전성 부담 완화로 생산적 분야(중소·벤처, 코스닥)로의 자금공급 원활화 기대

②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① (부동산 대출) 종투자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 →
[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

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내 매각·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증권회사의 부동산 분야 투자 쏠림현상 완화 유도**(다만, NCR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방안 검토)

*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p 하락(추정)

③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까지 적용 확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

② (일반 증권회사)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

참고 6 그간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 개편 추진경과

◆ 그간 NCR 규제가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를 강제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금투분야 건전성규제 지속 개편('14~'17년)

① (新NCR 도입) NCR 산식을 변경하여 자금공급 규모가 증가해도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기준]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권고 < 150%, 요구 < 125%, 명령 < 100%
→ [개선]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권고 < 100%, 요구 < 50%, 명령 < 0%

○ 다만,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해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

* 총자산 / 자기자본 < 1,100%(경영개선권고); 1,300%(경영개선요구)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별도 NCR 적용) 기업대출이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출 운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성 규제상 제약을 대폭 완화

* [기준] 만기 3개월 이상 대출은 무조건 자기자본에서 차감(위험가중치 100%)→
[개선] 모든 형태의 대출채권은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가중치 적용(AAA 등급의 경우 0~2.4%)

③ (KOSDAQ150 유동성인정지수 추가) KOSPI100, KOSPI200 이외에 KOSDAQ150을 유동성인정지수로 추가하여 코스닥 주식 투자부담을 완화*

* (개별위험값 하향효과) KOSDAQ150 지수 및 동 지수 기초 ETF : 4% → 1%
KOSDAQ150 구성종목 : 12% → 6%

④ (유동화증권 위험액 산정 개선)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선 및 판매, 투자 등을 주로 하는 증권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 [기준] 만기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1.6%~18% 위험값 적용 →
[개선] 만기별로 세분화하여 신용등급/만기에 따라 0.5%~18% 적용

①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강화) 집단대출 편중위험 관리 등을 위해 집단대출 취급에 대한 중앙회의 관리 강화

- (배경) 상호금융권별로 자율적으로 집단대출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조합별 집단대출한도 : (농협) 전월말 대출잔액의 20%,
(신협)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수협) 전년말 대출잔액의 10%

- (세부방안) 집단대출 편중을 완화하고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회 자율로 운영하던 집단대출 관리를 체계화
- 각 조합의 집단대출 취급 前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화

② (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체계 개선) 은행·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총당금 부담을 합리화

- (대상) 여신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경기민감업종(부동산·건설·도소매 등)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하여 적용

*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근 증가세가 가파르고 가계대출과 구분이 명확치 않은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 회피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

- (적립기준) 정상 1% → 0.85%, 요주의 10% → 7%, 회수의문 55% → 50%

< 금융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 >

구 분	상호금융			은행 및 저축은행	
	현행	개선(안)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정상	1%	1%	0.85%	1%	0.85%
요주의	10%	10%	7%	10%	7%
회수의문	55%	55%	50%	55%	50%

☞ 상호금융업권 총당금 부담감소(약 △400억원), 기업대출 유인증가 기대

③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

① **(고위험 주담대)**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시 원금상환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

* [현행] 바젤Ⅰ 적용으로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전액 1순위 저당권 35%, 그 외 50%)
→ [개선] 주담대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도한 확대유인 관리

②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18년부터 시행된 총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여타 업권과 비교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

* [요주의 총당금 적립률] 현행 2% → ('18년) 4% → ('19년) 5% → ('20년) 7%,

(1)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허용

(2) 요주의 분류사유 중 '부실징후 기업여신' 관련 사유 합리화

- 상호금융업권과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부실징후 예시 중 '차입금 과다*' 관련 사항 정비

* [현행] 금융회사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시 → [개선] 금융회사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시

-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 조정

* [현행]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은 '정상' 분류 가능 →
[개선] 동 기간을 1년으로 단축

④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 캐피탈사가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대출(정책자금)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캐피탈사 레버리지비율(10배)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은 제외하여 벤처·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도

* '17년 전체 온렌딩 자금(6.3조원) 중 2,700억원이 8개 여전사에 배정

① **(가계대출 위험관리체계 전면정비)** 은행권에 준하여 고위험 주담대, 신용대출, 연체자산 등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① **(고위험 주담대)**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시 원금상환 10% 미만) 위험계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2.8% → 5.6%)

- * 만기일시상환, 3건 이상 담보대출자 등은 은행권에 준해 위험계수를 이미 상향 적용 중
- **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 및 실무준비를 고려하여 단계적 반영(예: 2년) 등 검토

② **(신용대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여, 위험계수를 '고위험 주담대' 보다 높은 (현행 4.5%→)6% 수준으로 설정

③ **(연체자산)** 주담대·신용대출 위험계수 조정 등과 연계하여, 연체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도 전반적으로 상향

- * (예) 연체 신용대출(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0% 이상) 위험계수: 현행 6% → 8%

👉 **시장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억제 효과 기대**

- * 보험사별 RBC 비율은 평균 △1%~△4%p 하락(추정)

②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 차주의 담보능력 外 원리금 상환능력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

○ **(현행)**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 차주의 담보능력(LTV 50% 이하 부문)만 신용리스크 경감에 반영

- * [위험계수] LTV 50% 이하 부문 : 6% → LTV 50% 초과분 : 최대 9%

○ **(개선)** LTV 비율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DSCR*)도 감안하여, DSCR이 1.4 초과시 위험계수를 (6%→)4.5%로 추가하향 적용

- * (DSCR) 특정기간 동안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DSCR (부채상환비율, Debt Service Coverage Ratio)	=	$\frac{\text{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text{해당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	---	---

- 아울러, 신용위험 경감 LTV 부문도 (50%→)60% 이하로 확대

VI. 향후 추진계획

① 대부분 세부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

○ 다만,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 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

※ 금번 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안) >

구 분	세부과제	요조치사항	개정추진
은 행	①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¹⁾	감독규정 개정	'18.1분기
	② 고위험 주담대 RW 상향 ²⁾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8.1분기
	③ 리스크 관리평가(필라2) 개선 ³⁾		'18.下
	④ 가계부문 CCyB 도입 ³⁾	감독규정 개정	'18.下
	⑤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 기업구조조정 자산건전성 분류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기업외화대출 부담 완화	검사매뉴얼 개정 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등	'18.1분기
금융 투자	① 모험자본 역할 강화	감독규정 개정	'18.1분기
	②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²⁾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③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18.上
중소 금융	①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감독규정 개정	'18.1분기
	② 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제고		
	③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²⁾	감독규정 개정	
	④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보험	①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²⁾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8.1분기
	②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		

1) 유예기간(예: 6개월) 부여 검토, 2) 단계적·점진적 시행방안 검토

3) 세부모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관계기관 협업 후 규정개정 추진

[별첨]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종합)

-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비율(BIS, NCR, RBC 비율 등)은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
- ◆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

